

CCTV도 속수무책... 쓰레기 무단투기 ‘기승’

주택가 골목 등지 쓰레기 ‘수북’
여름철 벌레·악취 등 불편 호소
“민원 급증해... 불편 방지 노력”

광주 시내 곳곳에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어 여름철 벌레·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지자체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안내문과 단속 CCTV를 설치한 상태지만 효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찾은 광주 서구 유촌동의 주택가. 골목마다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빌라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 근처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고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CCTV까지 설치돼 있었다.

사람이 지나가면 단속 CCTV에서 빛이 나와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는 것을 알렸지만 지나가는 일부 시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손 가득히 쓰레기를 들고와 버리는 모습이었다.

이곳에는 일반·재활용 쓰레기뿐만 아니라 배달음식물 등 다양한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일부는 구멍 사이로 내용물이 흘러나와 심한 악취를 풍겼다.

같은 날 찾은 동구 지산동의 주택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단속 CCTV 앞 화단은 각종 쓰레기 봉투로 뒤덮였으며 일부 봉투는 훼손돼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도로 일부를



최근 찾은 광주 서구 유촌동 한 주택가 골목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 있다.

점유한 모습이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분리되지 않은 채로 뒤섞여 있었고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부착한 뒤 배출해야 하지만 이 역시 무단으로 방치돼 있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 장시간 방치된 쓰레기 더미 주위로 는 쉼쉼한 악취가 진동할 뿐 아니라 각종 벌레가 꼬였다. 행인들은 각종 쓰레기로 오염된 골목을 지나며 미간을 찌푸렸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폐기물 배출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폐기물은 배출자의 집·

상가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별도의 배출 장소가 미비한 곳에서는 각종 경고문과 단속 CCTV가 배치됐음에도 적발·단속이 어려워 일부 시민들의 무단 배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의 개수는 802대로 자치구 별로 △동구 123대 △서구 117대 △남구 223대 △북구 277대 △광산구 82대가 설치돼 있다.

지난 2023년도 광주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830건으로 △

동구 291건 △서구 541건 △남구 157건 △북구 504건 △광산구 337건이다. 시 전체에서 하루 평균 5건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벌레·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효과적인 폐기물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여정민(26)씨는 “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문이 붙고 단속 CCTV가 설치된 곳에 더욱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것 같다”며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단속·예방 효과가 클지 의문

이다. 보다 효과적인 폐기물 관련 정책과 조례 등이 구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모(32)씨도 “집 앞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 인해 쓰레기 배출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여름철 벌레·악취로 인한 불편이 크다”며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더불어 강력한 법과 제도 등을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는 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는 단속·계도와 더불어 홍보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여름철 방학·휴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배달음식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며 “쓰레기 무단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점검·정비에 나서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이다. 다만 전원 신원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에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에 대한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법원 “농협 조합장 비위 제보 간부 ‘보복성 인사’는 무효”

인사발령처분무효소송 원고 승소
조합장 1심 후 면직·전보 인사

광주한 단위농협조합에서 조합장 선거 비위를 공익 제보한 간부 직원에 내린 전보 인사에 대해 법원이 ‘보복성 인사’로 부당하다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단위 농협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은 조합이 간부 직원이던 A씨를 조합 운영 주유소 소장으로 전보한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주문했다.

조합 모 지점장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농협중앙회에 조합 내 횡령 비위를 알리며 익명으로 감사 요청서를 보냈다. 광주경찰청에도 조합 임원의 횡령 혐

의 관련 진술도 했다.

이듬해 1월에는 당시 조합장 후보 B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조합원에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경찰에 공익 제보하기도 했다.

그 사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B씨와 횡령 비위 연루 임원은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각기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에 한 달 앞서 조합은 A씨에게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조합원 61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임원의 비위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뿐이다. 이미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조합은 ‘개인정보 유출, 규정·지시 위반, 조합의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A씨를 간부 직원에서 면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다. A씨는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 소장으로 전보 발령돼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업무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다. 영업 관리 또는 임원 비리 행위 입증 위

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조합원 개인 정보를 조회했을 뿐이다. 조합은 현 조합장과 그 측근 임원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인사 명령을 했다. 간부 직원이 주유소 소장이 전보된 사례는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점장으로서 비교적 우수한 근무 능력을 지녔던 A씨를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주유소 소장으로 전보할 만한 구제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했다.

김은지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알로에, 대두이소플라본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알로에, 대두이소플라본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연료
無
첨가제
첨가제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